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과 장 정인식	042-481-5168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유용신	042-481-517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8년 9월 11일(화)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뇌가 자원인 우리나라,
지식재산 기반 고용창출 · 혁신성장에 앞장선다**
- 지식재산 일자리 1만 1천개 간접 고용 3만 5천개 창출 -

- 무형경제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인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특허청은 9.11(화) 07:30~09: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이목희 부위원장 주재)에서 「지식재산(IP)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 · 확정했다.
 -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특허출원 건수 기준, 연간 약 20만건)으로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일자리 창출 · 혁신 성장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미국 상무부, EU 지식재산청 등에 따르면, 지식재산집약산업(1인당 지재권 수가 전체 산업 평균 이상인 산업)의 일자리 비중이 미국 18.2%, EU 27.8%, 한국 17.9%에 이르고, 임금 수준도 비집약 산업 대비 40~50%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성공률이 미 보유 스타트업 대비 2배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은 기업 성장과 창업 성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특허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지식재산 분야 직접 일자리 1만 1천개, 기업 성장을 통한 간접 일자리 3만 5천개 창출을 목표로 4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I. 첫 번째로 지식재산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일자리를 확대한다.

- 학생-대학-기업이 삼자 협약을 체결해 대학이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하는 취업연계형 지식재산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22년까지 6,2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 현재 3개 지자체(대전, 강원도, 부산) 및 해당 지역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현재 6개에서 '22년 12개로 확대하고, 소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및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졸 청년 일자리 2,100개도 창출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 확대(16개 → '22년 57개), 지식재산 교육 선도 고교 운영('22년까지 200개 신규 지정) 등을 통해 대학·고등학교의 지식재산 교육 커리큘럼, 교원 양성 등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청년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한다.
- 교육 취약 계층 청소년 대상의 발명 교육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발명교육센터를 확대(201개 → 231개)하고, 지역 아동 교육 전담 인력을 충원함과 동시에, 전국 5개 광역 거점에 발명 교육 통합 지원센터를 새롭게 구축하여 관련 일자리 4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발명교육센터) 개별 학교 중심 소규모 발명 교육 과정 운영,
(발명교육통합지원센터) 발명체험관, 교육 기자재, 교원 연수 등 체계적 지원

Ⅱ. 두 번째로 지식재산서비스업¹⁾ 성장을 지원하여 고용을 확대한다.

-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32%에서 '22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간 시장을 키우고, 특허 분석 일자리 200개를 창출한다.
- 공공 자원·데이터를 대폭 개방하여 신사업 창출·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SMART3 평가모델*의 해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다수의 지식재산서비스 업체가 활용해 해외 진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 미국, 유럽의 특허정보를 추출하여 질적 평가(9등급)·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10.4~'17.12까지 66만건 사용('11년 3만건 → '17년 13만건 수요 증가)

- AI 학습용 IP 데이터, 심사 문헌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데이터를 확대 개방(90종 → 115종)하고,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는 「IP 데이터 기프트 제도」도 확대*해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 자격조건 완화(3년 이내 → 7년 이내 창업자) 및 무상 제공기간(3년 → 5년) 확대('18년)

- 아울러, 미취업 대졸자, R&D 퇴직 인력 등을 지식재산 조사·분석 전문 인력으로 교육·양성하여 '22년까지 1,000명을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에 채용 연계할 계획이다.

Ⅲ. 세 번째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 K-유니콘 8개 배출을 목표로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풀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 및 액셀러레이터에 투자하는 펀드를 150억원 규모로 운영('19년~)한다.

*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센싱) 중계 등

1) 지식재산 정보 조사·분석(IP 정보서비스 회사), 지식재산 출원·등록 대리(변리사 등), 지식재산 가치 평가·거래·번역·경영 컨설팅 등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민간자금으로 '22년까지 8,000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투자하여 5,6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 가치 평가 지원을 확대(연간 450건→'22년 2,000건)하고, 지식재산 담보 대출의 부실 발생시 담보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 시스템도 도입*해 IP 금융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 발명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마련('19년)한 이후, 정부·은행 공동출연 추진('20년)

□ 중소·벤처 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해 해외출원, IP 분쟁 발생 시 필요 자금을 대여 받는 특허 공제 사업도 운영('19년~)한다. '25년까지 2만6천개 社 가입과 5,000억원 규모의 적립액을 조성할 계획이다.

VI. 기업 성장·고용 창출을 뒷받침하는 IP 인프라를 구축한다.

□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은 세계 최고 수준(10개월)이나, 심사 투입 시간 부족* 등으로 심사 품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16) : (한) 217, (일) 171, (미) 77, (중) 68, (유럽) 58

**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 '16) : (한) 49.1, (일) 25.1, (미) 28.5('12.9~'16)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 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심사관의 심사 투입 시간을 적정화*하고, 공중심사**, 심사관 협의 심사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 지능 기반 특허행정 정보 시스템(지능형 IP 검색·상담·번역)을 구축('19~'23)하여 심사 효율성 및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특허심사 1건당 총 투입시간(시간) : ('18) 13.0 → ('20) 17.4 → ('22) 20.0

** 산업현장의 기술자료 및 지식을 심사에 활용

□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담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 정부가 직접 기술·아이디어 탈취 행위 조사·시정권고, 지재권 침해 수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함께 전담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인 특허·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는 징벌 배상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조사, 특허·디자인·영업비밀 침해죄 수사 등(법안 계류중)

□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채용하여 온라인 위조 상품 재택 모니터링단도 운영('19년 100명 → '22년 200명)하고, 정부 R&D에서의 특허 연계 기술개발(IP-R&D) 도입 확대, 대형 R&D 사업단(50억 이상)의 특허전담관 채용 등을 통해 47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S&P 500 기업의 무형 자산 비율이 87%에 이르는 등 무형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식재산 청년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유용신 사무관(☎ 042-481-517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식재산(IP) 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 내용

1. 추진배경

- 새로운 지식과 기술, 창의적 아이디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재산이 국가·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무형 경제 시대로 진입
 - * S&P 500 기업 무형 자산 비율 : '75년 17% → '85년 32% → '95년 68% → '15년 87%
- 지식재산은 산업 경쟁 우위를 강화하여 기업성장·고용창출 전인
 - * 지식재산 집약산업(1인당 지재산 수가 평균 이상인 산업) 일자리 비중 및 개수 : (美) 18.2%, 2,788만개('14), (EU) 27.8%, 5,700만개('11~'13), (한국) 17.9%, 373만개('15)
-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특허출원 건수 기준)으로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을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할 필요

2. 주요내용

[비전]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 및 산업 경쟁력 향상

[목표] 국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강화
- '22년까지 양질의 지식재산 직접 일자리 1만 1천개·간접 일자리 3만 5천개 창출 -

① 지식재산 분야 청년 인재 양성·일자리 창출

- (취업연계형 청년 IP 인재 양성) 정부·지자체·대학·기업 협력*을 통해 대학생 IP 실무 교육·취업을 지원하여 6,200개 일자리 창출
 - * (특허청·지자체) 채용 프로그램 운영, (대학) IP 실무교육, (기업) 산학협력 및 채용 지원
- (IP 분야 고졸 청년 채용 지원) 발명·특성화고 지정(6개교 → 12개교) 확대 및 소속 학생 교육·취업* 지원을 통해 2,100개 일자리 창출
 - *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 운영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취업+병역 동시 해결) 지원
- (IP 청년 인재 양성 체계 강화)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17개→57개) 및 선도 고교(200개) 운영, 발명교육센터 확대 등 IP 교육 강화 및 관련 고용 창출(400개)
 - * 지식재산 전담교수 채용 및 강좌 개설, 지식재산 융합 교육 등 지원

② 지식재산서비스업²⁾ 성장 지원을 통한 고용 확대

- (민간 개방 확대) 특허 선행기술 조사 물량(정부 발주)의 민간 점유율을 32%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여 양질의 특허분석 일자리 200개 창출

2) 지식재산 정보 조사·분석(IP 정보서비스 회사), 지식재산 출원·등록·법률 대리(변리사 등), 지식재산 가치 평가·거래·번역·경영 컨설팅 등 지식재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인력 양성·채용 지원) 미취업 대졸자 등을 IP 조사·분석 전문 인력으로 교육·양성하여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에 채용 연계(1,000명)
- (공공 자원·데이터 개방) 온라인 특허평가시스템인 SMART3 평가모델* 및 공공 IP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IP 서비스업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 * 정부에서 구축·운영하는 특허 질적 평가(9등급)·분석 정보제공(66만건 사용) 시스템
 - ** IP 정보 상품 수(누계) : ('17년) 90종 → ('18년) 94종(예정) → ('22년) 115종 목표

③ 스타트업·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성장 촉진

- (K-유니콘 육성) 중기부와 협업하여 K-유니콘 8개 배출을 목표로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IP 창출·보호·활용을 풀 패키지*로 지원
 - *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센싱) 중계 등
- (IP-R&D 지원)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강한 특허를 확보하도록 최적 기술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IP-R&D 확대(5년간 1,880개 과제)
- (IP 기반 투자 펀드 운영) 모태펀드·민간 자금으로 8,000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투자하여 5,600개 일자리 창출
- (IP 담보대출 활성화) 중소기업 IP 가치평가 지원을 확대하고, IP 담보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 도입
- (IP 분쟁 부담 경감) 전문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IP 확보·특허 분쟁 리스크 완화를 위한 특허공제 사업* 운영
 - * 중소기업이 자금을 적립하여 해외출원 및 분쟁 대응시 사용(2만6천개社 가입 목표, ~'25)

④ 기업 성장·고용 창출을 뒷받침하는 IP 인프라 구축

- (특허 심사 인프라 확충) AI 기반 특허행정 시스템 구축(1,000개 일자리 창출), 심사 인력 증원, 공중 심사·협의 심사 확대 등을 통해 강한 IP 창출 지원
- (IP 보호 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조사 체계 구축*, 징벌 배상(3배) 제도 도입, 위조상품 모니터링 요원 채용(200명) 등 추진
 - *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조사, 특허·디자인·영업비밀 침해죄 수사 등(법안 계류중)
- (IP 전문가의 R&D 참여 확대) 정부 R&D에서의 IP-R&D 도입 확대, 대형 R&D 사업단(50억 이상)에서의 특허전담관 채용 등을 통해 470개 일자리 창출